

집행부는 8/8 양보안 폐기하라

지난 3일 노사공동위 8차 교섭은 5분 만에 결렬됐다. 사측이 “한치의 양보는커녕 실무협의를 논의를 안보다 후퇴한 안을 최종 제시”(화성지회 <함성속보>)했기 때문이다.

사측은 사내유보금을 1백 조 원 넘게 쌓아두고도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려 한다. 우리의 노동조건을 후퇴시켜 8/8 시행에 따른 손해를 만회하려는 것이다. 노조 집행부가 제대로 싸워 보지도 않고 양보안을 제시하며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자, 사측은 더 기가 살아 ‘우리는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다’고 배짱을 부리는 것이다.

심지어 사측은 관리자 3백여 명을 동원해 노사공동위 해체와 집행부의 양보안 폐기 등을 촉구하며 교섭장 앞 시위를 벌이던 조합원들에게 폭행을 가했다. 여성 조합원 한 명이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고 여러 명이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이송되는 등 부상자가 속출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부·지회 집행부가 사측의 만행을 방조하고 도끼로 유리문을 깨고 들어가 끝내 교섭 테이블에 앉은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열린 협상이 금세 결렬된 것은 사측 제시안이 워낙 형편 없었던 탓도 있지만, 교섭장 앞 연좌농성을 벌이며 양보안 폐기를 요구해 온 활동가들의 역할도 컸다.

‘현장공동투쟁’은 5월 말부터 교섭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양보교섭을 막아 왔다. 8/8 양보안 폐기뿐 아니라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5·12 신규채용 합의 폐기를 주장하며, 오랜만에 정규직-비정규직 활동가들이 함께했다.

김종석 집행부는 교섭장 봉쇄 투쟁이 “조합원들을 희생양 삼는” 소수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현장공동투쟁’의 항의는 노동조건 후퇴에 반대하는 대다수 조합원들의 바람을 대변한 것이었다.

UPH-UP, 휴일 축소와 20분 잔업 등을 통한 추가시간 확보를 담은 집행부



노동조건 후퇴에 반대하는 대다수 조합원의 바람을 대변한 교섭장 앞 연좌시위.

의 양보안에 대해 조합원들은 불만이 크다. 지난주 말부터 시작된 조합원 연서명(양보안 폐기와 즉각적인 대의원대회 개최 등)에 벌써 수천 명이 동참했다.

집행부는 ‘현재의 생산량 수준을 유지해 주지 않으면 임금 보전은 불가능하다’며 양보는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2012년 8/9 도입 때 생산량 보전 논리에 발목 잡혀 후퇴하기 전까지 ‘임금 삭감, 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노조의 기본 원칙이었다.’

집행부는 ‘위기 때문에 내년에는 물량이 줄 수 있다’며 생산량을 지켜야 고용과 노동조건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생산량과 임금을 연동시키면, 나중에 생산량이 줄어들 때 임금을 삭감하라는 사측의 압박에 더 쉽게 무너질 수 있다.

3일 교섭 무산 직후 화성지회 집행부는 이제 “노사공동위원회 협의의 의미가 없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조합원들의 원성을 들어가며 협의를 강행했다”는 점도 시인했다.

대의원대회를 즉각 개최하라

그럼에도 집행부가 양보안을 폐기한 것은 아니다. 화성 집행부는 양보안이 문제라는 점은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 지부 집행부는 사측이 집행부의 양보안을 뒷받침할 투자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으며 ‘전향적 안을 촉구하고 있다. 양보안을 기초로 협상을 지속하겠단 뜻이다.’

지부 집행부는 임단협 시작 전에 8/8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조합원 총투표로 의사를 묻겠으니 협상을 방해 말라고도 했다.

그러나 현장 조합원들은 노동강도 강화 등 조건 후퇴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조합원들의 요구를 받아안아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은 채 양보안을 만들고는, 집행부가 합의할 때까지 조합원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조합원들을 무시하고 수동화시키는 비민주적 태도다.

지금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양보안 폐

기 등의 안건을 제시하며 대의원대회 개최를 발의한 상태다. 집행부는 더는 시간 끌지 말고 이런 요구를 즉각 수용해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해야 한다.

대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집행부의 양보안을 완전히 폐기시키고, 함께 요구한 5·12 신규채용안 폐기와 통상 임금 투쟁 등을 결의해야 한다.

‘새희망’ 등 일각에선 ‘양보안만 폐기되면 8/8 문제는 차기 집행부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조합원들의 노동시간 단축 열망을 무시한 무기력한 입장이다.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고, 조합원들의 분노도 살아 있다.

좌파 활동가들은 임금 삭감, 노동강도 강화, 비정규직 차별 없는 8+8 시행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며, 대의원대회에서 이 요구가 채택되도록 해야 한다. 조합원들의 분노가 살아 있을 때 요구를 바로잡고 투쟁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임금·노동조건 후퇴 없는 8/8 요구안을 채택해야 한다

주간연속2교대제 요구는 애당초 불황기의 물량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반대로 자동차 산업 호황기에 우리의 등골을 빼 온 '장시간 노동'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구다.

사측은 '경제 위기', '해외 생산 확대' 등을 이유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지만, 현대·기아차 그룹사는 공간에 돈을 쏟아 두고 글로벌 5위를 자랑하며 해마다 생산을 늘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고 당연하다.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임금이 줄면, 우리 노동자들은 줄어든 임금을 벌충하려고 특근에 매달리게 되고 실노동시간은 줄지 않는 악순환을 멈출 수 없다.

그런데 사측은 몇 년 전부터 주간 2교대 논의 때마다 '생산량 만회 방

안이 마련돼야 임금 보전도 가능하다'며 노동시간 단축 요구의 본질을 왜곡하고 비틀어 버렸다.

안타깝게도 지부 집행부는 2012년 8/9 때 이미 물량 보전과 임금 보전을 연계하자는 사측의 논리를 수용해 버렸다. 노조가 생산량 보전 방안을 제시하면서 노동강도 강화와 휴게·식사 시간 축소 등이 이어졌다.

그러나 생산량 보전이 노동시간 단축의 전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논리는 필연적으로 노동강도 강화, 추가 노동시간 확보, 전환배치 등의 조건 후퇴를 부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거나 휴일·휴게시간 등을 늘릴 때도 우리 노조는 생산량과 무관하게 임금·노동조건을 방어했었다.

우리가 단호하게 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투쟁해

야, 사측은 생산량 유지를 위해 우리의 조건을 희생시키지 못하고 다른 방안을 찾을 것이다. 그것이 노동계급의 다른 부문에도 더 좋다. 많은 청년들이 실업으로 고통받는 지금, 사측은 노동비용 줄일 궁리만 하지 말고 질 좋은 정규직 고용을 늘려야 한다.

생산량 보전 논리 수용의 헛점

그런데 안타깝게도 적잖은 좌파들도 생산량 보전 논리에 정면으로 도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라인 증축, 공장 신설 등 설비 투자를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그러나 생산량 보전이라는 사측의 경영 고민을 나눠 지려는 출발 자체가 노동조건 단호한 방어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첩경이다. 경제 위기가 심화될수록 양보론에 취약해지기 쉽다. 생산량 보전 논리를 수용하면,

공장 신설 등이 경영에 부담만 초래해 위기를 부르고 결국 물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측의 위협에도 무기력할 수 있다.

사측은 8/8 시행으로 공장을 풀가동하지 못하게 된 것을 속 쓰리게 여긴다. 지금 우리가 노동조건을 단호하게 방어하지 못하면, 장차 사측은 "밤샘노동 철폐"라는 대전제 자체를 무너뜨리고 3교대제와 상시 심야조 도입마저 들고 나올 수 있다.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이 생산량이나 투자 정도에 자동 연동되는 것은 아니다. 임금과 노동조건은 사측과 노동자 쌍방의 세력관계에 달려 있다. 즉, 우리의 투쟁이 중요한 것이다. 좌파 활동가들은 임금·노동조건 후퇴 없는 8/8 시행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대의원대회에서 이런 요구가 채택되고 투쟁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 통상임금·노동시간 법 개악 추진

“가이드라인에 맞서 즉각 총파업 태세를 갖추자”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에 이어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고령자들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노조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가이드라인을 6월 말~7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근속별 호봉체계가 단협으로 보장된 기아차에선 당장 가이드라인 발

표가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미조직·취약노조 사업장에서선 취업규칙 개정만으로 임금피크제를 손쉽게 도입할 수 있고, 이런 사례가 늘어날수록 대기업 노조들도 사용자들의 압박을 견뎌내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지난해 통상임금 투쟁이 잘 보여 줬던 것처럼 말이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은 국회의

원들에게 6월 국회에서 통상임금, 노동시간 단축 관련 법 개악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7월에는 해고를 쉽게 하는 가이드라인 발표도 예고된 상태다.

민주노총은 최근 “노동시장 구조 개악, 가이드라인에 맞서 즉각 총파업 태세를 갖추자”는 위원장 호소문을 발표했다. 금속노조는 대의원대회 결정대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서 파업을 선언해야 하고, 기아차 지부는 적극 동참해야 한다.

메르스 확산보다 이윤을 더 걱정하는 박근혜와 정몽구

메르스 환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때와 꼭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는 무능·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한국 자본주의의 민낯이 다시금 드러나고 있다.

며칠 전 기아차 산보위는 '합의 1주

일 내 마스크 1개 지급' 등 어처구니없는 메르스 대책을 내놨다. 그러면서 메르스 확진자나 격리자 다수 발생 시 “생산의 차질이 없도록 노력한다”고 결정했다.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이고 돈벌이가 우선이란 말인가!

지금 우리는 화성 공장 조합원 한 명이 병원에 격리된 상태에서 불안에 떨면서 일하고 있다. 노조 집행부는 사측이 “생산 차질” 운운하는 헛소리 집어치우고 환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메르스 확산 방지, 사태 악화 시 휴업 조처 등을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구입하고 정기구독, 후원해 주세요

대표전화 02-777-2792
기사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이메일 ws@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도 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

wspaper.org

〈노동자 연대〉를 함께 읽고 토론합시다!

문의 : 김우용 (010-3092-9003)